

2012년, ESCO 사업 정책 자금의 한계와 제안



정리 / 편집부

2012년 6월 현재, ESCO 정책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현재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대안찾기에 애쓰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12년도 하반기 ESCO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니즈를 리서치하고 종합, 분석하여 ESCO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 중에 있다.

ESCO 자금 수요조사를 통해 기대하는 향후 지원 내용

ESCO협회는 ESCO자금의 조기 소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ESCO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해 지난 4월 ESCO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ESCO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생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차 접수현황]

(6월 15일 마감기준)

사업구분	기업구분	잔여예산 (백만원)
ESCO	대기업	-
	중소기업	7,891
	소계	7,891
목표관리	대기업	7,844
	중소기업	37,980
	소계	45,824
절약시설	대기업	154
	중소기업	11,574
	소계	11,728
합계		65,443

ESCO자금수요조사 결과, ESCO32개사 총 138건, 1,910억원의 ESCO 자금이 필요(총 사업비 2,839억원)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자금 추가 지원을 위한 향후 일정 조 기발표 필요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의 ESCO사업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서라

도 추가적인 정책자금 지원과 민간용자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ESCO 자금수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계
건수	27	111	138
금액	71,399	119,631	191,030

설비별 자금수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정개선	보일러	조명	냉난방
건수	10	5	81	11
금액	25,170	13,717	37,774	17,950

구분	동력설비	폐열회수	기타	계
건수	3	26	2	138
금액	1,550	86,839	8,030	191,030

계약월별 자금수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11	25	31	19	9	5
금액	10,243	43,336	37,786	56,254	9,267	3,351

구분	10월	11월	12월	미정	계
건수	4	3	1	30	138
금액	8,300	7,800	6,000	8,693	191,030

(*위의 조사결과표는 2012년 4월 이후의 ESCO자금 수요기준입니다.)

일관성이 필요한 ESCO 지원정책

올해 배정된 ESCO 정책자금은 2,100억 원으로 2011년 3,900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ESCO 사업활성화 대책에 의해 대기업에 배정된 ESCO자금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한 대기업 ESCO사업 규모의 축소로 ESCO자금이 제대로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자금 축소로 인해 일각에서는 ESCO사업이 이제 흥미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아래 [연도별 ESCO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오히려 2010년에서 2011년에는 ESCO성과가 2배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CO사업은 단순히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전년도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이 감소하거나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ESCO사업이 국가에너지절약시책으로써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지원에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은 절약시설자금, 목표관리제, ESCO자금 총 3가지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절약시설자금에서 대기업은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ESCO자금은 6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듯 동일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자금 내에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내에서는 ESCO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사업분류 없이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일관성 있는 ESCO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연도별 ESCO자금지원 현황

구분	'93~'01	'02	'03	'04	'05	'06
지원건 수(건)	1,508	491	328	167	202	156
지원금 액(억원)	2,735	1,400	1,003	831	1,829	1,333
구분	'07	'08	'09	'10	'11	계
지원건 수(건)	106	100	100	122	202	3,482
지원금 액(억원)	1,357	1,115	1,318	1,307	2,854	17,082

창의적인 지원 대안으로

ESCO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

우리나라 ESCO사업은 1992년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222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ESCO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절감량에 대한 M&V(측정·검증) 등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널리 쓰여지고 있는 ESCO 투자 사업방식은 ESCO가 에너지사용 시설에 선 투자 한 후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 등을 회수하는 성과배분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ESCO가 에너지절감량(사업성과)을 보증하고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를 조달하는 성과보증방식으로 변환될 예정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국내와는 달리 성과보증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ESCO 프로젝트를 고객이 은행이나 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다. 영국도 은행을 통한 TPF(Third Party Financing)를 이용한다. 영국의 금융기관 및 은행은 ESCO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ESCO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국가 정책자금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모두 ESCO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ESCO사업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정책자금의 사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뿐 아니라 자금의 차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자금에만 의지해서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결국에는 정책자금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어 버리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근 산은캐피탈, 신한은행 등 금융업계에서 조명분야(LED) ESCO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발한 민간자금 유입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신용도가 낮은 ESCO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기업 신용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벌써 ESCO가 도입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수익성 있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ESCO업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